

## 제목 :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 기획재정부와 KDI는 6월 22일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 동 토론회는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으며,
  - 작년 말부터 KDI가 진행해온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

### < 토론회 개요 >

- 일시, 장소 : '10.6.22(화),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별관 3층)
- 참석 : 기획재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유통물류진흥원)

\* KDI 원장(현오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임종룡) 축사

- 현오석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의 서비스화는 선진경제의 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흐름으로서 산업화 초기단계의 공업화 육성과는 차별화된 전략 및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향후 소득 증가,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세계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서비스화의 지속적인 진전이 예상됨을 언급하면서,
  - 정부의 역할도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보다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함
- 한편,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이제는 서비스산업 고용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교육·의료,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고용확대를 유도하며
  -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선진국에서 사업서비스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주도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 세계적인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전문자격사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등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중간재형 사업서비스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
- 금번 토론회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주제 하에 진행된 제 1세션에서
  -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
  - 한편,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향후 국민경제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기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에 관한 제 2세션에서
  -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장기 선진화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전문직 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두자고 제의
    - 아울러 서비스업의 중장기 선진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첨부자료 참조)를 제시하며 규제개혁, 시장개방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경쟁여건

조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

- 한편,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비스 선진화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서비스 규제개편체제의 조정기능 취약, 서비스업관련 기초통계의 미흡, 지원대상 선정의 일관성 부족 등을 제시

□ 마지막으로,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를 다룬 제 3세션에서

-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가 집단이기주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철폐를 향후 서비스 선진화의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
-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방송·통신 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을 ①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②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설정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과제로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전문인력 및 공급기관의 선진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
- 한편,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은 영세형 서비스업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첨부 : 세부 일정, 발표자료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13:00 ~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li> </ul>
13:30 ~ 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개회사 : 현오석(KDI 원장)</li> <li>    축사 : 임종룡(기획재정부 차관)</li> </ul>
<p>Session 1</p> <p>13:50 ~ 14: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li> <li>    사회 : 현정택(인하대)</li> <li>    발표1 : 황수경(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간의 관계”</li> <li>    발표2 : 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기변동 및 물가 간의 관계”</li> <li>    토론 : 김종일(동국대), 이항용(한양대), 배진호(건국대)</li> </ul>
<p>Session 2</p> <p>15:00 ~ 1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선진화 전략의 기본 방향</li> <li>    사회 : 김준경(KDI 국제대학원)</li> <li>    발표1 :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li> <li>    발표2 : 최석준(서울시립대)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추진체계의 평가”</li> <li>    토론 : 김홍석(산업연구원), 송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충모(기획재정부), 김현수(국민대)</li> </ul>
<p>Session 3</p> <p>16:20 ~ 18: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li> <li>    사회 :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li> <li>    발표1 :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 I: 전문직 서비스”</li> <li>    발표2 :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 II: 방송·통신 서비스”</li> <li>    발표3 :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사회 서비스 선진화 방안”</li> <li>    발표4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영세형 서비스업 실태 및 개선방안”</li> <li>    토론 : 고영희(대한변리사회), 곽선화(부산대), 김승식(유통물류진흥원), 김원식(중앙대), 이장혁(고려대),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li> </ul>

**Session 1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발표 1】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간의 관계**

황수경 (KDI 연구위원)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주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GDP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각각 60.3%와 67.3%에 도달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도소매, 음식·숙박업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도 28개국 중 27위에 위치

**<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2007) >**

(단위 : US 1,000\$/명)

순위	서비스업 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서비스	
1	룩셈부르크	117.8	룩셈부르크	67.2	룩셈부르크	116.9	룩셈부르크	186.1	룩셈부르크	72.8
2	미국	84.5	벨기에	63.6	미국	113.3	아일랜드	167.3	미국	59.7
3	아일랜드	78.8	미국	59.3	그리스	109.4	미국	153.3	아일랜드	56.1
4	프랑스	73.0	스웨덴	53.4	이탈리아	97.9	프랑스	129.2	일본	53.4
5	벨기에	72.3	오스트리아	53.1	벨기에	92.2	그리스	125.6	그리스	52.4
22	아이슬란드	49.5	슬로바키아	35.5	독일	65.8	영국	91.7	핀란드	42.1
23	포르투갈	46.9	캐나다	34.5	오스트리아	65.0	덴마크	90.7	한국	38.5
24	헝가리	43.9	체코	33.8	아이슬란드	62.4	네덜란드	85.1	헝가리	34.4
25	체코	43.2	뉴질랜드	33.3	슬로바키아	50.9	폴란드	78.7	체코	34.2
26	슬로바키아	42.1	헝가리	29.9	한국	50.6	슬로바키아	76.8	아이슬란드	32.2
27	폴란드	42.0	포르투갈	28.2	헝가리	44.3	한국	72.4	슬로바키아	30.9
28	한국	38.9	한국	17.9	폴란드	39.8	체코	59.3	폴란드	29.1
	OECD	61.4	OECD	44.4	OECD	75.1	OECD	110.6	OECD	45.7

주: 캐나다는 2005년, 호주,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2006년. OECD는 단순평균 수치임.

자료: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2010.4.

## □ 서비스업과 경제성장

- 향후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금융, IT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등 생산자 서비스의 시장확대 및 생산성 제고 필요

## □ 서비스업과 고용 창출

- 200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를 동반하나, 서비스업의 경우 1% 성장할 때 0.66%의 고용 상승을 동반하여 고용창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는 고용 증가와 생산성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생산성 감소를 동반한 고용 증가는 저부가가치·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를 왜곡

## □ 서비스업 부문별 확장 가능성 및 정책 방향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고용 측면에서는 과잉이지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확장가능성이 높음
  - 이 유형의 서비스업에서는 산업구조 선진화가 일차적 과제이며, 고용측면에서는 일자리의 질 개선, 업종 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
- 운수·창고·통신업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과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
- 반면, 생산자 서비스업과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고용과 산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향후 업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

## 【발표 2】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기변동 및 물가 간의 관계

이재준 (KDI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에서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대외여건의 충격에 기인한 경기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
- 향후 국민경제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기변동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업은 낮은 소비유예 경향, 재고의 부재, 비교역재적 특성, 낮은 자본집약도 등으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내재적인 경기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 광업과 농림어업 건설업의 내재적 변동성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중간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며 가장 안정적인 부문은 서비스업임
- 다만, 서비스업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금융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부문에 기인
  - 업종별 변동성 기여도 상의 특징적인 점은 금융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서비스업 변동성의 약 1/3 가량이 금융업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임.
  - 아울러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변동성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제조업 대비 낙후된 서비스업 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생산성 향상과 변동성 축소의 양 경로를 통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발표 3】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

이시욱 (KDI 연구위원)

- (중장기 선진화 전략의 기본방향) 전문직 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 향후 시장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생산자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보
  - 아울러, 시장기능 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소득 형평성, 비전문직 인력 고용 안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 필요
- (부문별 접근방식) 서비스업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산업의 조합인 바, 생산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multi-track approach 필요
  - IT, 금융,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등의 생산자 서비스를 주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장개방 촉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생산성 제고 및 양질의 고용확충을 기함
  - 한편, 고용확충 잠재력이 가장 큰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가급적 민간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기조 유지
  - 영세형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서비스 선진화 6대 전략과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중장기 선진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음

○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경쟁여건 조성

-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 등 현재 추진이 지연되는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부처 간의 이견 혹은 의원 입법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상위의 조정 메커니즘 확보가 절실
- 상시적인 규제타당성 평가제도 도입도 고려

○ 서비스업 혁신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대학내 및 대학간 경쟁구도를 제고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유인을 확대시키는 것임**

○ 시장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시장 확대 유도

- 현행 FTA 및 WTO 범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진하여 국내 서비스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촉진을 유도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정부지원 상의 차별성 시정

-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 집약적인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자산 규모, 유동비율 등 지원절차 상의 기준을 제조업과 차별화할 필요

○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달체계 개선 및 민간 역할 제고

○ 영세형 서비스의 영세성 극복 및 고용기회의 안정화

## 【발표 4】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추진체계의 평가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 제조업 등의 중간재 서비스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대표적 사례

### < 법률서비스의 사례 >

-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소송대리, 공증, 법률자문 등으로 규정
- 현실 : 양적 진입규제로 인해 한정된 수의 변호사들이 대부분 소송대리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
  -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정부·기업, 사회단체 등에 진출한 법조인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며, 기초자치단체 소속 법조인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

- 규제개편 체제의 지속적 개선 및 조정메카니즘 강화 필요
  -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 상의 우위가 있는 관련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 □ 서비스 선진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 서비스업의 경우 범정부적 정책 조율 및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총괄 기능을 하는 근거 법률은 부재한 반면, 특정 소규모 산업 관련 법률\*이 산재
  - \* 예시)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음악산업육성법’ 등
- 서비스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
-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지원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

**【발표 5】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 I: 전문직 서비스**

김두얼 (KDI 연구위원)

□ 추진실적 평가

- 동 부문의 추진과제는 ①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와 ② 컨설팅 산업 육성방안으로 대별
  -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미흡 등으로 추진이 지연 중
    - \* 법률사무소 설치요건 및 출자제한 완화 이외에는 추진실적 미흡
  - 컨설팅 산업 지원은 그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

□ 제도 개선방향

-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철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 설정
  - 관련 규제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존 규제체제의 개편 및 규제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고려
- 시장조사업 등의 경우 시장 확대를 직접 지원에 앞서 국가 통계 자료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일차자료의 이용을 보다 손쉽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지원이 요망

## **【발표 6】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 II: 방송·통신 서비스**

이수일 (KDI 연구위원)

### □ 추진실적 평가

-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한 방송·통신시장구조 개선 방안은 기존 사업자의 이해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선진화 방안 취지가 훼손될 우려
-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들의 대부분도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 지연 상태

### □ 제도 개선방향

- 방송·통신부문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을 ①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②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설정할 필요
-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① 콘텐츠가 유통되는 서비스계층에서의 경쟁 활성화 ② 콘텐츠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 콘텐츠제작자가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필요
- (무선 인터넷 활성화) 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 ②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통신서비스 ③ 안전한 이용환경 ④ 데이터 트래픽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전송망이 필요

## 【발표 7】 사회 서비스 선진화 방안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추진실적 평가

- 고용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하반기에 파견업종 개편 등의 중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경우 등록제로의 전환 및 품질 강화방안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과 연계되어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 □ 제도 개선방향

- (사회적 기업의 육성) 특히, 선진국에서 발달해 있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인력 및 공급기관 선진화) 종합 사회서비스 기관의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의 칸막이 제거 및 규제 완화, 자격·훈련의 표준화 및 호환성 증대, 사회서비스 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종합 플랜 마련 및 추진
-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지역단위의 ‘저수지형’ 전달조직 마련 및 통합적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제공 및 저비용 전달구조를 방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도 해소
  - \* 저수지형이란 재원이 집중되고, 서비스가 통합되며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

## 【발표 8】 영세형 서비스업 실태 및 개선방안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

### □ 추진실적 평가

- 영세형 서비스업 추진정책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시책 성격
  - 정책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소통이 충분치 못하여 정책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
  -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도입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체감되지 않고 여전히 사업자들은 어려움 호소

### □ 제도 개선방향

- 영세형 서비스 분야는 정책수단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직접적인 개입·지원 정책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인위적인 사업조정정책보다는 컨설팅지원, 직업교육 등 퇴출비용을 낮추거나 퇴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원활히 하는 정책에 초점
-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사업자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사업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
  - 영세사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음
  - 미국 등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